제3장

법질서 확립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사회 구현

제1절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 · 시위 관리

제2절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제3절 재해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1절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관리

1.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가. 2021년 집회 · 시위 발생 현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는 10,300건으로 2,165건(17.4%)이 감소하였고, 의경폐지에 따른 경찰부대 규모 감축에 따라 동원된 경찰부대는 14,328개 부대로 전년 16,810개 부대보다 2,482개(14.8%) 부대가 감소하였다.

[표 3-1]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 · 시위 건수 등 현황('20 · '21년)

구분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시위 수(건)	경찰부대(개)	경찰 부상자(명)
'21년	10,300	14,328	40
'20년	12,465	16,810	31
전년대비	-2,165	-2,482	+9
(%)	(-17.4%)	(-14.8%)	(+29%)

[표 3-2] 최근 5년간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시위 현황 (단위 : 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집회시위	10,438	9,627	13,864	12,465	10,300

나. 선진 집회 ·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노력

경찰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방역적 집회관리'에 힘쓰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을 불문하고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투입할 수 있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장시간 도로점거 등으로 인한 시민

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조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조치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경찰부대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을 사전에 지급하는 한편, 출동 전 · 후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검사' 등의 조치에도 힘을 기울였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단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장이 사전 경력배치부터 사후 사법조치까지 전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현장검거와 함께 예외없는 신속한 사법조치를 진행하였다.

집회 현장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채증활동의 범위 ·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을 제정('21.1.)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소음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음 측정장비 다목적 거치대' 및 '대상소음도 자동 계산 앱'을 개발 ·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 3-1] 페이스 쉴드



[그림 3-2] 다목적 거치대



다. 주요 집회 · 시위

(1)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

대규모 인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임에도 불시집결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자제 및 엄중 사법조치 방침을 경고하였고, 집회 당일은 가용경력 · 장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도심일대 임시검문소 등을 운영하고 차단선을 구축하여, 주요 집결 예상지점의 사전집결을 차단하였다.

차단선 밖 불시집결 시도에는 경력 및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 배치하여, 전차로 점거 및 불법행진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채증활동을 하였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자 주동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사법처리하였다.

[그림 3-3] 불시집결 차단



(2) 광복절 집회

여러 단체가 광복절 연휴 기간(8.14.~16.) 서울 도심권 일대에서 미신고 불법집회 및 변형된 1인 시위등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경력 · 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세종대로 · 태평로 일대 집결을 사전차단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결이 차단되자 경찰 차단에 항의하며 차단선 외곽에서 미신고 집회를 추진하였다. 이에 경찰은 추가집결 차단 및 해산절차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불법집회 주최자 등을 대상으로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주최 단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집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경찰의 차단선 구축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통행안내팀, 배너 · 입간판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3) 사드기지 관련 상황

[그림 3-4] 사드기지 진출입 통행로 확보



2021년 5월부터 사드기지에 정기적인 공사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반대단체 등에서는 차량 진 · 출입 시간에 맞춰 진입로에 연좌하거나 차량 통행방해를 시도하는 등의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사전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였고 집회 · 시위 도중 경력폭행 · 장시간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는 현장검거를 통해 차량 진 · 출입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집회참가자 중 다수가 여성 · 노약자 · 종교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여성경찰관 기동대도 배치하고, 대화경찰과 함께 종교인보호팀 · 인권보호팀도 운영하여 인권과 안전보호에도 중점을 두었다.

(4) 자영업자 차량시위

[그림 3-5] 차량시위 차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회가 제한되자 2021년 7월 14일부터 9월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미신고 차량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이 집회 · 시위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였다.

경찰은 차량 시위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귀가토록 경고 · 설득하고, 불법 시위 차단을 위한 제지, 과도한 경음기 사용에 대한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하였다.

2. 한국형 대화경찰제 운영 내실화

가. 도입배경

공공안녕정보국은 집회 참가자 및 시민, 경찰 사이에 소통 · 협력 활동을 통해 인권 · 안전 중심의 집회문화를 구현하고자, 스웨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8년 8월부터 서울 · 인천경찰청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8년 10월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나. 운영 현황

대화경찰은 경찰서 정보과와 경찰관기동대 등 소통 적임자들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집회 · 시위의 규모 · 위험성 등에 따라 적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2021년 대화경찰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86,552건 집회 · 시위 중 마찰 · 돌출행동이 우려되는 59,467건(전체 집회시위 대비 68.7%)에 배치되었으며, 인권과 안전을 보호 · 보장하고, 공공질서와 조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화경찰 제도 도입 이후 경찰부상자 수 · 불법행위 감소 등 집회시위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집회참가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화적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집회 관련 지표('17→'19→'21년)** : △경찰 부상자 116→76→40명 △사법처리 1,814→1,620→1,506명 △평화적 집회에 대한 국민 인식도 64.3→84.8→74.9%

▶ **집회참가자〈297명〉 설문조사('20년)** : △대화경찰 활동 만족도 77.0% △집회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 73.6% △물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 77.6%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에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선정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2021, 165개 회원국) 주제 발표, 시애틀 경찰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제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 각종 재난 · 재해 현장에서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활동 분야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 향후계획

향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내 대화경찰 제도 운영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집회 · 시위 등 사회갈등 영역에서 대화경찰의 효과성 · 전문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안녕 질서가 공존하는 선진 집회문화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1. 국내·외 테러정세와 테러양상

가. 국제 테러정세

2021년에는 탈레반의 재집권('21.8.)에 고무된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 기도 및 ISIS · 알카에다 연계조직의 활동반경 확장 등으로 테러정세 불안은 지속되었으나, 각국의 대테러활동 강화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테러리스트의 이동제한으로 테러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1,951건→1,357건)

[표 3-3]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빈도	3,928	4,096	3,736	2,255	1,533	1,978	2,079	1,663	1,951	1,357
사망	9,869	11,889	15,909	17,329	8,356	8,299	7,916	7,637	8,207	5,744

나. 국내 테러정세

국내에서는「테러자금금지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중요시설 폭발물 설치 협박('21.3.) · 駐韓 외국대사관 폭파 협박('21.10.) 등 국내 테러위협 상황이 발생하였다.

※ UN지정 테러단체 자금지원 혐의자 5명 실형선고(징역 6월~1년 6월)

다. 2022년 테러 전망

2022년에는 코로나19 진정 후 국경통제 완화시 테러세력의 글로벌 이동 등 활동 확대가 예상되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감축으로 안보공백 우려되고 고질적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중동 ·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제분쟁에서 군사력보다 에너지 · 사이버 등 비군사적 방안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부각되어 테러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무장반군 · 민병대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전술을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 외 우리 국민의 테러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치안불안 지역 체류 국민과 진출기업 겨냥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증오형 테러나 해적 등의 납치범죄 위험도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베이징 올림픽(2월) · 카타르 월드컵(11월) 등 주요 행사 계기 우리 국민 신변보호 강화 및 기업 진출지역 테러정세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가. 경찰 대테러 조직 · 인력 · 장비 확대

충남 · 전남지역의 테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남 · 전남특공대를 창설(7월)하여 전국 15개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 안전활동을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을 35명을 증원(47→81명)하고 대장을 경정급으로 격상(1월)하였다.

또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기동대에 대간첩 대테러(47개 중대), 화생방 현장통제(34개 중대) 임무를 부여하고 특화부대로 지정 운영(6월)하였다.

전국 경찰특공대에 전파차단기, 드론탐지기, 폭발물처리로봇 등 신형 장비를 포함하여 총 42종 127억 원(전년대비 11.8% 증가) 상당의 대테러 장비를 도입 · 보급하였다.

[그림 3-6] 전파차단기



나. 대테러 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가이드북 발간

드론 · 화생방 테러위협에 효율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테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다.

초동조치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테러작전 초동조치 가이드북을 발간(8월)하여 현장 중심의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다. 테러취약시설 · 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 등 선제적 예방활동

국가중요 · 다중이용시설, 외국 공관 · 저 등 2,317개소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지도점검(8,760회), 특공대 현장배치(7,538회), 관계기관 합동훈련(1,519회), 시설종사자 대상 테러예방 교육(2,504회 13,172명)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코로나19 백신 도입 호송 관련 경찰특공대 등 투입 및 백신 생산 보관시설 및 예방접종센터 등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수송 관련 특공대 투입 등 선제적 테러예방 및 임시생활시설 대상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하였다.

라. 대테러연구센터 설립 및 정보·논문집 발간 등 대테러 전문연구의 수행

경찰 대테러 업무 예측 분석에 따른 테러예방을 보조할 국제대테러 연구센터를 경찰대학에 설치(8월)하였다.

부서장 중심 화생방테러의 신속한 대처와 지휘역량을 보장토록 화생방 대테러 주요정보집을 제작(대테러센터 · 환경부 · 질병청 등 7개 기관 협의)하였고, 새로운 테러경향 대응체계 등 대테러 분야 교수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수록(논문 15편)한 제43호 대테러연구집을 발간(12월)하였다.

[그림 3-7] 대테러정보집



마.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 훈련 실시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군 · 소방 · 환경부 등 관계기관 통합지휘능력 및 대테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 대테러 교육(312명)'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요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청 경찰서 대테러 담당 및 112타격대장 등 대상 초동대응요원 전국 순회 교육(611명), 위기 협상실무요원 교육(125명), 사제폭발물 처리 전문과정 교육(38명) 등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하였다.

[그림 3-8] 국가대테러부대 연합훈련



바. 국 · 내외 대테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 · 내외 대테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 주관 해경 · 군 특공대(707특임대) 등 100여명 참가하는 국가대테러 연합훈련(10월), 환경부 · 질병관리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화생방 6개 관계기관 97명이 참여하는 화생방 대테러 종합훈련(11월)을 실시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 대테러장비 점검을 통한 성능미달 장비를 불용조치(작전권총 105정, 방탄헬멧 132개, 방탄복 82벌 불용)하여 실전에 부합한 장비를 갖추는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3. 청원경찰 제도 운영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등의 경영자가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참조)

1960년대부터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였으나,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1962년도에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 중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 수행상 필요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683개 시설에 13,593명이 근무 중이다.

[표 3-4] 청원경찰 현황

구분	총계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관 및 지자체외
인원	13,593	9,973	3,602

경찰청에서는 청원경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원경찰 제도에 대한 청원경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청원경찰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청원경찰 법령 주요 내용 및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제작, 각급 경찰관서 및 사업장에 배포하여 활용 중이다.

제3절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1.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가. 개요

2021년 코로나19 재유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그 밖에 산불 · 화재와 건물붕괴 등 각종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경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육 · 훈련 강화 및 장비보급 확대, 위기관리 법령 ·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경찰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경찰 재해 · 재난 역량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항

(1) 재난관리장비 보급 확대

각종 재난상황에서 초동조치 및 현장통제, 복구활동 지원 등 경찰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화생방 보호장비(K5 방독면, TIC 정화통, 보호복), 방사선 선량계, 감염병 보호장비(레벨C형 보호복, 마스크), 산불용 장화,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조구급장비를 구매 · 보급하였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현장 접점부서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경찰의 응급환자 구조 환경을 개선하였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레벨C형 보호복, 마스크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현장 경찰관의 감염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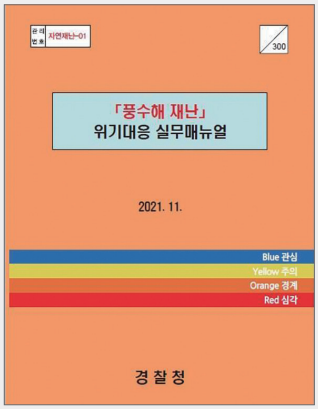
[표 3-5] '21년 경찰 재난관리 장비 보급 현황

구분	보급대상	보급수량
화생방보호장비 (△K5방독면 △TIC정화통 △보호복)	▶ 유해화학물질 취급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지역관서) 442개소	3,500세트
방사선 선량계	▶ 원전 관할 7개 시도청 소속 경찰관서 13개署 · 현장통제부대 68개소	320대
감염병보호장비 (레벨C 보호복 등)	▶ 전국 경찰관서	8,561세트

구분	보급대상	보급수량
산불용 장화	산불 다발 시 · 도청 8개청	900켤레
자동심장충격기	전국 경찰관서	730대

(2) 교육 ·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림 3-9]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경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집합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주관 합동 상황조치훈련 6회, 관계기관 · 지자체와 합동 재난대응훈련 1,026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화학사고, 방사능사고 등 대응에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재난 분야 교육은 한국원자력의학원, 화학물질안전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총 95명을 교육하는 등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현장 경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였다.

재난관리 관계기관 간 공조 · 협력체계를 구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2021년 10월 ~ 11월 2개월 동안 실시된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에 234개 경찰서가 총 311회 참여하였고, 특히 11월 3일 울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울산시, 울산소방, 낙동강환경유역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석유화학공단 내 폭발테러로 인한 화재 · 유해화학 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정부 재난관리 체계 내에의 경찰 역할과 임무를 점검 · 숙달하고, 소방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3) 위기관리 법령 · 매뉴얼 개정

2021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경찰의 재난관리 활동의 법적 근거인 「경찰 재난관리 규칙」('21.7.15. 전부 개정)과 「경찰 비상업무 규칙」('21.5.18. 일부개정)을 개정하였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는 재난위기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한 치안상황관리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경찰재난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기존의 경비 · 작전 · 안보 · 수사 · 교통 비상 외 재난비상을 신설하였고,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 실시하

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재난상황에서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사고 계기로 정부방침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2종 전면 개정 이후 7년 만에 경찰청 직제개편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재난관리 노하우를 적극 반영하여 32종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을 완료하였다.

다. 2021년 주요 재난관리 활동

경찰은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태풍 ·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 연 인원 381,881명을 투입하여 현장 질서유지, 교통통제, 인명구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서별로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7종 12건의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였는데,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이 상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표 3-6] 2021년 경찰청 재난상황실 설치 현황

구분	기간	재난 지역
감염병	코로나 '20.1.20.~ (계속)	전국
가축질병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19.9.17.~(계속)	인천, 경기남, 경기북,강원
풍수해	집중호우 7.2.~9.1.(23일 간) ※ 7.2.~7.3.(인천), 7.5.~7.8.(전북), 7.5.~7.7.(부산,경북), 7.6.~7.7.(전남), 7.7.~7.8.(경남), 7.6.~7.11.(대구), 7.8.~7.9.(강원), 7.9.~7.10.(강원), 7.15.~7.16.(강원), 8.1.~8.2.(강원), 8.2.~8.3.(전북), 8.8.~8.9.(강원), 8.18.(강원), 8.21.(강원), 8.24.(대구), 8.25.(부산), 8.27.(전북), 8.31.~9.1.(강원, 경남), 9.1.(부산, 경북)	전국
	태풍 루핏 8.8.~8.9.(2일)	전국
	태풍 오마이스 8.23.~8.25.(3일)	전국
	태풍 찬투 9.16.~9.18.(3일)	전국
	강풍 1.28.~1.29.(2일)	대구

구분	기간	재난 지역
한파 · 대설	1.6.~1.7.(2일)	광주
건물 붕괴	광주 계림동 노후주택 붕괴 4.4.	광주
	광주 학동 철거 건물붕괴 6.9.	광주
화재	이천 물류센터 화재 6.17.~ 6.22.(6일)	경기남부
산불	경북 안동 · 예천 산불 2.21.~2.22.(2일)	경북(안동, 영주, 예천)

(1) 코로나 19

[그림 3-10] 백신수송 훈련



경찰은 2020년 2월 27일부터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였으며, 연 인원 778,141명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 질서유지, 불법행위 단속 · 수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역대책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경찰은 정부 예방접종 계획 수립 이전인 2021년 1월 15일부터 '경찰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TF'를 운영하여 선제적 코로나 19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정부 예방접종 계획 발표 후에는 기능별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수송 · 보관 · 접종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경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경찰청 코로나19 대응활동'에서 자세히 후술하였다.

(2) 집중호우 · 태풍

[그림 3-11] 요구조자 구조



폭우로 쓰러진 실종자 구조(9.14.)

2021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8.5mm로 평년 882.4mm 수준으로 총 강수량은 적었으나, 7 · 8월 강수가 집중되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3개였으며 이 중 제9호 루핏, 제12호 오마이스, 제14호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3명, 재산피해는 622억 원으로 지난 5년 대비 인명 · 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은 장마에 앞서 5월 31일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풍수해 대비 수난구조장비를 일제점검 및 재배정하였고, 재난대비 토론형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또한 계획에 따라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체계를 구축, 선제적 예방순찰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경찰은 기상예보에 따라 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등 주재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상황점검회의에 10회 참석하여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연인원 31,080명을 투입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방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주력하여 산사태 등 재난피해 우려지역 18,304개소를 점검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조치하기도 하였다.

2. 경찰청 코로나19 시기별 대응활동

가. 3차 유행(2020년 11월~2021년 2월)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1월 7일부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었다. 개편된 방역정책 하에서 확진자 수는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지만,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다소 이른 방역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제3차 대유행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1 · 2차 때와는 다르게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요양병원 · 교정시설(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유사한 형태의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12월 13일에는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일일 발생 확진자가 1천명을 초과하였고, 3차 유행 기간 중 일평균 확진자는 530명 수준이었다. 국내 발생 341일 만인 12월 25일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로는 역대 최다인 1,240명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초과하였다.

방역당국은 11월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을 선포하였다. 이 기간동안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함께 10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집회 · 시위는 서울 전역 1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예배 강력권고 △요양시설 등 주기적 선제점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금지 △무도장 집합금지 △버스 · 지하철 22시 이후 20% 감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평가 관련 서울시 · 교육청 · 자치구 합동TF를 가동하여 대학가 주변 음식점 · 카페 및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수험생 방문이 잦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하였다.

11월 중순 100명 대를 유지하였던 확진자 수가 대학가와 노량진 학원가 집단감염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12월 500~6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아울러 12월 23일부터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성탄절 ·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등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제한하였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소규모 모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경북 상주시에 있는 인터콥 BTJ열방센터에서는 2020년 10월 9일~10일(1차), 11월 27일~28일(2차) 두 차례에 걸쳐 1박 2일 선교캠프를 개최하며 수백명의 사람이 모여 집합금지를 위반하였고 결국 2차 선교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15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4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실시된 전수검사 과정에서 185명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24일 288명, 28일 233명이 추가 확진되며 2021년 1월 말까지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00여명에 이르렀다.

2021년 1월 24일에는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계속해서 연장하였으며, 설 연휴를 포함한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1년 1월 8일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인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질병관리청장)을 구성 · 운영하였다. 2021년 9월까지 1차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전 국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5가지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총 5.6천만 명분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우선적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관련자와 119구급대원, 코로나 전담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표 3-7]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안(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table>
<tr><th>시기</th><th>1분기</th><th>2분기</th><th>3분기</th><th>4분기</th></tr>
<tr><td>-</td><td>130만명</td><td>900만명</td><td colspan="2">3,325만명</td></tr>
<tr><td>가군</td><td>▶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td><td>▶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td><td>▶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td><td rowspan="3">▶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td></tr>
<tr><td>나군</td><td>▶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td><td>▶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외)</td><td>▶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td></tr>
<tr><td>다군</td><td>▶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td><td>▶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입소자·종사자</td><td>▶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td></tr>
</table>

(1)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경찰 활동 조정

3차 유행이 시작되는 직전인 2020년 11월 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에 경찰은 생활방역추진단 회의 및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사회

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경찰업무 조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회의 · 행사 · 교육훈련 · 출장 등 14개의 전 기능 공통사무와 19개의 기능별 고유사무 등 총 33개 업무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4일 이후 유지 중인 비상근무(現 경계강화)에 대한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간 중단된 무도훈련 · 직장훈련을 재개하고, 목욕탕 · 헬스장 · 체력단련장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단계별 운영방침을 조정하였다. 집회관리는 단계별 제한인원이 세분화되고, 1단계에 '500명 이상 집회 개최 시 지자체 신고 필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집회신고내역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경대본회의)** △〈2.5단계〉 배석자 수 1/2 조정 △〈3단계〉 필수 기능 참석

▶ **(비상 근무)** △〈2단계〉 경계강화 △〈2.5단계〉 권역 또는 전국 을호 비상 발령

※ 지역 여건 고려하여, 지방청장이 비상근무 발령(필요시 경찰청장 발령)

(2) 경찰관서 방역 강화

경찰관 확진으로 인한 경찰관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경찰은 방역상황에 따른 테마별 경찰관서 방역실태를 점검을 추진하였다.

먼저 2020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1.5단계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의 고위험 소관시설 기능별 점검'을 통해 각 기능별로 소관시설 방역을 점검 · 강화하였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경찰관서 방역 현황 일제점검'을 통해 관서별 방역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전 시도청 · 경찰서 및 부속기관 280개소를 대상으로 총 43개의 점검항목 중 출입구 체온계 비치, 청사 소독, 다중행사 연기 등 필수 32개 항목과 식단 칸막이 설치, 회의실 마스크 걸이 설치 등 권장항목 11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관서별로 평균 42개 항목 이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기간 전 지구대 · 파출소 2,03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에 대한 방역조치 및 관서 내 소독 실태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전 지역경찰관서에서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117센터에

서는 근무자간 차단칸막이 설치 및 1.5~2.5m 거리 이격, 상담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으로 방역을 강화하였고, 182실종아동센터에서는 근무자 간 파티션 설치, 2m 간격 확보 등의 방안을 통해 밀집도를 완화하였다.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는 연말모임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연말연시 경찰관서 방역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찰관서 방역대책」,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른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림 3-12]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그림 3-13] 생활치료센터 내 검체 채취실



[그림 3-14] 전담병동 의료진 Level D 착탈의 교육



[그림 3-15] 전담병동 상황실 현황



(3) 경찰병원 지원

가) 국립국제교육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추가 운영

경찰병원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9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SK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데 이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56일간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였다.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각종 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입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 활력 징후 데이터를 병원정보시스템에 곧바로 공유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지원인력은 의사 3명, 간호사 5명, 방사선사 · 전산 · 원무 · 행정 각 1명으로 총 12명이었으며, 이 기간 5,548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의료인력 지원('20.12.30.~'22.5.18.)

경찰병원은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병상동원 명령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병실들이 위치한 3~7층이 하나의 공조시설로 연결되어 있어 일반 입원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병행치료가 불가했고, 외부에서 음압격리구역까지 완전한 독립 동선이 없으며, 병실전실 · 병실 · 화장실 이외 복도전실 · 탈의실에 음압격리구역이 없는 등 감염병전담병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먼저 입원환자를 퇴원 · 전원조치를 하였고,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시설 · 장비를 구축하였다.

환자–의료진간 동선분리 및 감염자 관리를 위한 임시가벽 · 전실 · 상황실 등의 시설과 환자상태 관찰을 위한 CCTV 60대, 이동형음압기 52대, 이동식 음압베드 2대, 레벨D방호복 등의 장비를 설치 · 구비하였고, 12월 30일부터 병상 74개, 의료인력 117명 지원하였다.

(4) 「2020 코로나19 경찰대응 활동 종합 I 」발간('20.12.14.)

코로나19는 경찰이 재난 대응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참여한 첫 사례로, 특히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소재불명자 소재추적과 역학조사 인력 지원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K–방역'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데는 경찰의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전반을 종합화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펜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20 코로나19 경찰대응 활동 종합 I 」을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240일간의 경찰활동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였다.

(5) 수도권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인력 지원('20.12.14.~)

2020년 12월 7일,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에서 산출한 필요 파견 인력 규모는 총 800명이었다.

경찰은 12월 14일부터 제303기 실습생 중 서울 112명, 인천 45명, 경기남 154명, 경기북 51명 총 362명을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인력으로 지원하였다. 주요 업무는 보건소 업무 사정에 따라 일부 달랐으나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정보입력 및 관리, 역학조사 대상자 통보, 선별진료소 질서유지, 확진자 및 검체 이송 등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보조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00경찰서 소속 실습생은 코로나19 문진표를 빠르게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터 입력 시간을 1/3(50초→15초) 가량 단축시켜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6) 정부합동점검단 지원('20.12.18.~'21.1.17.)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의 지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민간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다.

정부합동점검단은 △행정안전부 2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경찰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전문가 1명 등 8명을 1개 팀으로, 총 8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수도권 지역 주요 집단감염 발생장소인 식당, 카페, 콜센터, 종교시설 및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스키장, 골프장 등을 집중하여 점검하였다.

1차 점검기간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17일간으로 경찰청 수사 · 생활안전 · 정보 · 외사 · 감사 기능에서 8명을 선발하여 합동점검을 지원하였다, 2차 점검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는데, 특히 2차 점검은 점검지역에 익숙하고 현장 단속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점검일자별 점검지역 관할 시 · 도경찰청 풍속 담당 경찰관이 현장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총 31일간 세종, 제주 제외 전국 15개 시 · 도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12,552개소를 점검하였고 고발 16건, 과태료 64건, 현지시정 888건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은 4월, 7~8월에 두 차례 더 운영되었으며 2021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의 점검을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되었다. 이후 상시 운영이 아닌 필요시 기획점검 형태로 전환되었다.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 ▶ 12.22. 23:50경,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예약손님을 받아 영업 중인 것을 적발, 지자체 인계하여 고발 접수 (경기남부)
- ▶ 12.28. 21:50경,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지자체 인계하여 고발 접수 (경기남부)
- ▶ 1.7. 22:30경,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내 2개 룸에서 6~7명이 음주 중인 것을 적발, 지자체 인계하여 고발 접수 (부산)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 1.11. 21:50경, 21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손님 6명을 받아 운영하던 호프집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강원)

▶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한 유흥업소 3개소 적발, 현지시정 조치 (충남)

(7)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21.1.25.~2.14.)

방역규제로 인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 유흥시설에서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경찰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합동하여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유흥주점 △위반업소 재영업 △영업제한시간 초과 영업 △불법 영업 등으로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키거나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첩보수집을 강화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경찰 2,122명, 지방자치단체 832명이 합동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14,725개소를 점검하였고, 감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 음악산업법 위반 등 총 982명(145건)을 단속하였다.

(8)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원

가) 백신 대응체계 구성

2021년 1월 8일 정부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적 총력지원 태세를 구축하였다. 이에 경찰은 수송지원본부 산하 계획운영반과 수송관리반에 경찰관 각 1명을 파견하여 백신수송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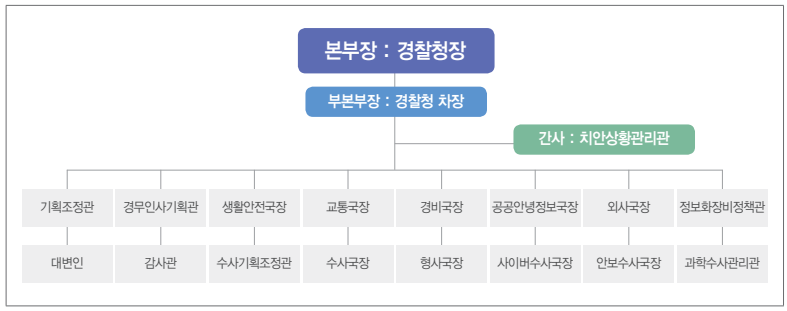
또한 1월 15일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으로 '경찰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T/F'를 구성 · 운영하였다. 백신접종 지원 관련 임무가 배정된 7개 기능* 주무과장을 각 대응팀장으로 지정하여 접종센터 안전유지, 긴급수송 지원,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변사사건 처리 등 예상상황별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 위기관리센터, 경무, 교통, 경비, 정보, 외사, 수사, 사이버

2월 중순 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 도입이 확정되고 접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2월 8일 지원 T/F를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본부'로 확대 · 개편하였다.

[그림 3-16]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본부



아울러 경찰은 체계적인 백신 수송 보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종지원본부 부본부장(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백신 수송 · 보관 · 접종 지원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안전관리대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각 시 · 도경찰청에서도 산하에 '백신 수송 · 보관 · 접종 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그림 3-17] 백신 수송 · 보관 · 접종 지원단



나) 백신 수송 중 에스코트 및 교통관리 지원('21.2.~)

경찰은 백신 수송 중 탈취 시도, 백신 반대단체 등의 도로점거 시위, 교통사고로 인한 백신 파손, 수송차량의 고장 등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또는 생산공장으로부터 물류센터까지, 물류센터에서 접종장소까지 에스코트 및 교통관리를 지원하였다.

백신의 수송 규모와 예상되는 피해 상황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이동구간에 따라 수송 중요도를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동구간별 적정 수준의 인력 · 장비를 지원하였다.

▶ **(A급)** 대규모 백신 수송으로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백신이 탈취 · 파손될 경우, 국가적 백신접종계획에 중대한 차질 발생

※ (이동구간) 인천공항 및 안동공장 → 통합물류센터(평택 · 이천) 등

▶ **(B급)** 수송 규모는 비교적 적으나 탈취 · 파손될 경우 해당 지역 내 백신접종계획에 상당한 지장 초래

※ (이동구간) 통합물류센터 → 중앙 · 권역 · 지역별 접종센터(약 250개소) 등

▶ **(C급)** 소규모 수송으로 피해 발생 시에도 접종계획 유지 가능

※ (이동구간) 통합물류센터 등 →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등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총괄 지휘하고, 구간별 수송은 각 시 · 도경찰청 교통과장이 각각 담당하였으며 '경찰청 백신수송 T/F팀'이 수송업무 지원을 총괄하였다. 제대편성은 수송차량 선 · 후구에 순찰차 각 1대씩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송 중요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하였으며 필요 최소한 범위내에서 신호를 개방하여 무정차 통과하였다. 또한 정체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정체도로를 관리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주요구간 우회도로를 사전 확보하였다.

A급 수송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B급 수송은 수송 차량이 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선구 순찰차를 한 대 배치하였다. C급 수송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하였다.

다) 백신 관련 허위정보유포 등 수사 활동

2021년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이 시작되자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인용 · 유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2월 9일 경찰청 · 질병관리청 ·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관련 부처간 공동대응체계를 출범시켰다.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운영 중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산하 '사이버 대책상황실'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상시 연락체계 유지하고 법률 검토, 수사의뢰 절차 조언 · 지원 등 긴밀한 공조를 하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였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원래 무료인 백신 비용을 전화로 지불 요구하거나(보이스피싱) △보건기관을 사칭하여 백신 등록을 요구하며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거나(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 · 판매 또는 위조된 백신접종증명서 제작 · 판매(불법판매) 등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허위사실유포 사건 총 234건을 내 · 수사하여 142건 251명을 검거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 총 62건을 내 · 수사하여 50건 77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자 상대 자진삭제 요청 73건, 게시 사이트 대상 삭제 · 차단 요청 56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 총 835건의 삭제 · 차단 요청을 하였다.

주요 검거 사례

- ▶ **(온라인)**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1명 검거[인천청 사이버수사대]
- ▶ **(오프라인)** 버스정류장 ·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라는 전단지를 부착한 피의자 1명검거[인천청 광역수사대]

(9) 동부구치소 호송지원('20.12.28.)

2020년 12월 28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발생하자, 법무부는 수용자 중 경증 · 무증상 확진자를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다. 법무부는 약 277km의 장거리 호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주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 호송차량 경호경비를 요청하였다. 호송인원은 353명으로 버스 17대를 4개조로 편성, 조별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였고 버스 1대당 무장교도관이 4명씩 탑승하였다.

경찰은 경비-교통-형사 기능 간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하여 이동 간 교통안전, 출발지와 도착지 안전확보 및 이동 중 돌발상황대비 경력지원, 수용자 탈주 시 검거 대비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기동대 5개 중대 및 교통경찰 63명과 순찰차 34대 지원하였다.

출발지인 서울동부구치소 진 · 출입로 주변에는 서울청 경찰관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하여 출차 동선을 사전 확보하고, 이동 중에는 그 중 2개 중대를 대열 선두(1제), 각 조별 후구(4제) 및 대열 중간(1제)에 배치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였다. 도착지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에는 경북청 경찰관기동대 2개 중대를 배치하여 호송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우발상황에 대비하였다.

[그림 3-18] 이동간 경력 배치



(10) 인터콥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지원('21.1.12.)

경상북도 상주 소재 종교시설인 인터콥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대표목사 등 관련자들은 방역당국으로부터 방문자 명단 제출을 요청받고도 명단을 지연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고, 방문자들 또한 연락을 기피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와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경찰의 소재확인 지원이 필요하였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찰에 관할 보건소의 연락두절자 추적관리와 역학조사 비협조사례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진단검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명단을 제출받아, 소재정보가 있거나 전화번호를 통한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경찰을 현장에 출동시켜 소재를 확인을 하였고, 주소 등 소재정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속대응팀을 통해 추적 · 확인토록 조치하였다. 대상자의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에서 방역당국에 통보하여 대상자와 직접 통화 연결 또는 방역당국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상주시는 경찰에 대규모 종교행사를 주최한 대표목사에 대해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실내50인, 실외10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집합금지 위반) 위반 사실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열방센터 CCTV · 노트북, 출입자 명부 등을 압수 · 분석하고, 참고인조사 등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3명을 송치하였다.

「감염병예방법」상 검사 불응 관련 처벌조항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질병청장, 지자체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3. 감염 여부 검사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 제5호)**

▶ **제46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질병청장,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중략)…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0호)**

(11) IEM · TCS 국제학교 집단감염 지원('21.1.26.)

1월 24일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IEM국제학교에서 127명, 이틀 뒤 TCS국제학교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 국제학교들은

미인가 기숙형 대안학교로 기숙사 방마다 7명~ 20명이 함께 지내는 등 감염전파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었으며 이로 인해 미인가 학교 ·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1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시 국무총리는 "IEM 국제학교 집단감염이 제2열방센터와 같이 전국적 확산사례가 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는 유사 대안학교 · 기숙학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요청 시 열방센터 · 신천지 대응에 준하여 조사대상자 자료 확보 및 소재추적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기숙형 미인가 학교 · 종교시설 현황파악을 지원하였다.

(12)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 신고대응 개선('21.2.8.)

경찰은 3차 대유행 대응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신고에도 선제적으로 출동하여 대응토록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출동 현장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 사안인 경우에도 경찰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출동경찰관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은 1월 21일 '방역수칙위반 신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112신고 접수단계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출동지령 시 '행정조치위반' 키워드 입력하여 관리하고, 신고처리 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현장출동 요청에 불응한 경우 112신고처리 종결내용에 사례 및 '지자체 미출동'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기관리센터에서는 112신고 통합시스템 검색 통해 지방자치단체 미출동 사례 현황을 취합하고 사례분석 후 중요 사안은 주 2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현장 특별기획점검팀에서 경찰청 통보사례에 대해 기획점검하였다.

이후 거리두기 하향 조정 시에 신고 대응수준을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2월 8일 '방역수칙 위반 신고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업시간 제한 등 단순 방역수칙 위반 신고인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112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현장경찰관 출동을 지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출동거부 시에는 경찰관도 비출동 종결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은 필요시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시설 내 진입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요청시에만 하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닌 폐쇄명령 · 집회금지 · 자가격리 위반 등 집합금지 등 강제처분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처리하도록 하였다. 112상황실은 신고접수 시 벌금 · 징역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 요청 후 현장경찰관 출동을 지령하고, 출동경찰관은 공무원과 함께 시설 내부에 임장하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을 폭행 · 협박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시민 간 시비 · 폭행 신고의 경우 일반 형사범으로 처리하고, 신고처리 중 방역수칙 위반사항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나. 3차 유행 이후 안정기('21.3.~6.)

3차 대유행의 큰 파고는 넘었지만, 국내 확진자는 여전히 평균 400~600명이 발생하는 등 대유행의 여파는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직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었고 영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 브라질 등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그 위험성은 여전하여 정부는 방역 정책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3월 12일부터는 수도권의 사우나 시설 운영금지를 해제하고 22~05시 영업 제한을 추가 적용하고,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다.

5월에는 강릉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5월 1일부터 22일간 확진자가 106명 발생하였고, 강릉시는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사장은 특정공장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되어있어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확산을 막기 어려워 지자체 차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릉시는 6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임시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을 상담 · 중재하고 의사소통 교육 등을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하였다.

11월 전국민 집단면역 생성을 목표로 정부는 계획대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추진하였고, 6월 1일 이후부터 1차 접종 및 접종완료자에게 가족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였다.

(1) 전국 지역접종센터 대테러 안전점검(3.19.~3.23.)

[그림 3-19] 접종센터 내부점검



[그림 3-20] 접종센터 외부점검



정부는 21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전국 시 · 도별 각 1개소씩 지역접종센터를 개소하였다. 경찰은 안정적인 예방접종 및 백신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접종센터에 대한 사전 대테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시 · 도경찰청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개 지역접종센터 대상으로 △안전책임자 지정, 자체 경비인력 운용 △CCTV 등 보안시설 운용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각 지역접종센터는 시설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시설별 자체 경비원(12개소) 및 민간 기계경비(5개소) 활용하여 자체방호 중이었다. CCTV 설치 상태, 출입문 시건 등 보안장비 · 시설 운용실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CCTV 추가설치, 백신 보관장소에 대한 방범창 설치, 차량돌진 방지 볼라드 설치 등을 권고하였다.

[그림 3-21] 안전점검 관계자회의



(2) 백신 접종 순위 선정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 마련

가) 백신 접종 순위 대상 선정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접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군별 접종시기를 달리 지정하였다.

[표 3-8]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가군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 유지 기간 고려)
나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군	▶ 정신요양·재활시설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경찰 또한 전국 14만 경찰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의 접종시기 선정 취지를 반영하여 감염 우려가 큰 부서 등이 먼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지정하였다. 순위 지정시에는 '①先민생안전 後사회공공안전 부서 접종 ②외근 · 현장근무자 · 상시 외부접촉 근무자 등 감염위험군 우선 접종'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1 · 2순위로 현장대응 경찰 및 민생부서 근무자와 의무경찰을, 3순위로 사회 · 공공안전, 청문부서, 민생부서 내근 근무자를, 4순위로 행정 · 지원부서 및 1~3순위에 속하지 않는 내근 근무자를 지정하였다. 그 외 경찰관기동대와 부속기관은 자체적으로 1~4순위를 지정하여 접종 순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학 교육생은 잔여 교육기간이 많이 남은 교육생을 선순위에 배정하도록 하였다.

나) 해외 도피사범 송환 담당자, 유치장 근무자 우선 접종

경찰 내 접종순위 지정과는 관계없이, 국외 도피사범 송환의 긴급성 ·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우선 접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경찰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3월 26일, 4월 12일 2일에 걸쳐 외사국 인터폴계 도피사범 송환 업무 담당자 10명에 대해 백신접종을 시작하였다. 외사국은 예고 없이 검거되는 도피사범 송환업무의 특성상 사전 공무 국외출장 계획수립이 어려운 점을 질병관리청에 설명하여 예외적인 승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교정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우선 접종방침에 맞춰, 질병관리청과 경찰 내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우선 접종을 합의하였다.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경찰서 유치장 · 호송업무 담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다) 경찰관 백신 접종 시작 및 접종률 제고 노력

3분기로 예정되었던 사회필수기능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경찰은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접종을 하게 되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일부 특이 혈정 발생 등의 안전성 논란으로 사회필수인력 중 30세 미만은 접종이 제외되어 먼저 30세 이상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30세 미만 직원 · 의경 · 사회복무요원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였다.

백신 접종은 자율적 희망에 따라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 · 안내하였으나, 접종 관련 부정적 보도 등이 이어지며 접종 예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이에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접종률은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백신 접종 관련 접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관서 · 부서별 책임관을 운용하여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접종 예약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접종 대상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예약률이 낮은 시도경찰청 대상으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진출하여 정확한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서장 우선 접종, 접종 후기 공유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대근무자들이 근무여건으로 인해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경찰관서 대체근무자 확보를 통한 탄력적 경력 운용, 공가 · 병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他부처 사례

- ▶ **(국토부)** 공문 1~2회 발송, 지속 관심 환기하고 임원 등 상대로 독려에 동참 요청
- ▶ **(관세청)** 주무과장이 세관장들에게 참여 독려 당부 전화
- ▶ **(소방청)** 구급대원들의 입소문에 따라 거부감 해소, 개개인 독려 전화 등
- ▶ **(기타 지자체 등)** 지휘부 · 임원이 1호 접종, 경과를 sns 등에 공유하여 신뢰 구축 노력(부산)

라) 백신 접종 관련 경찰청 복무관리 지침공가 · 병가 기준 수립

경찰은 4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지침을 반영한 자체 '복무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복무여건을 조성하였다. 접종자에 대하여 접종 당일 접종기관 이동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였고, 접종다음날 근육통, 발열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직원은 진단서 첨부 없이 '1일 병가'를 승인하였다.

(3)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21.3.31.)

2020년 9월 7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어 경찰 대면 · 실습 교육의 공백이 커지면서, 경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환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경찰은 질병관리청과 협의 하에 2021년 3월 31일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화를 계기로 인재개발원의 시설지원을 중단하였다. 지원 종료 이후 차단격벽, 창문열림방지 스토퍼를 철거하고 생활실 벽지 및 환풍시설 필터 공사를 하는 등 약 50일간 시설 복구가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인재개발원이 복구절차를 '생활치료센터 복구 표준모델'로 매뉴얼화하였다.

인재개발원은 20년 9월 7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약 205일 동안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수도권 · 충남권의 무증상 · 경증환자 2,323명의 입소 · 치료를 지원하였다. 당시까지 생활치료센터 중 최장 기간 최다 환자를 수용한 기록이며, 이러한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그림 3-22] (개선 전) 텐트형 초소



[그림 3-23] (개선 후) 컨테이너형 초소



(4) 하절기 치료 · 격리시설 지원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찰은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등 격리 · 치료시설 내 질서유지 업무 및 이탈방지 업무를 지원해 왔다. 지원 경찰관은 시설 외곽 경계근무 시 텐트형 초소 등에서 근무해 왔으나, 당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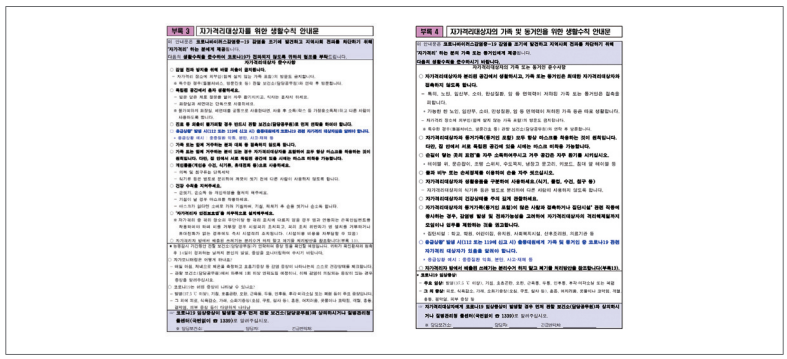
이에 경찰은 질병관리청 등 시설운영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 텐트형 초소를 컨테이너형 초소로 교체하고 에어컨 등 냉방기를 설치하는 등 하절기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5) 질병관리청 협조, 자가격리자 112신고 수칙 개선(3.22.)

대민 최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의 코로나19 감염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 또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중임을 사전에 밝히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감염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경찰은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및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에 "자가격리 중 112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접수 경찰관과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본인 및 가족 ·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4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판」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에 경찰 및 119구조대 등 긴급출동 요청 시 신고자 또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림 3-24]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하지만 이러한 수칙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의 감염 우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접촉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도착 전 경찰관이 감염 우려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8월 12일 경찰청은 '112신고 출동 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여부 확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신고접수 시 신고장소가 주거지이고 신고 내용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접수요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현장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경찰서 상황실은 코로나19 상황관리 시스템으로 신고전화번호 · 성명 등 검색하고 자가격리대상자 유무를 파악하여 출동경찰관에게 지령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출동 시에는 신고자에게 자동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코로나19 증상 통지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하였다.

자가격리자 여부 확인 예시

▶ **(신고접수 시)** 신고자분 계신 곳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계신가요?

▶ **(현장출동 시)** 000지구대 순11호가 출동하여 17:35에 현장도착 예정입니다. 긴급한 경우 010-6348-1751로 연락 바랍니다. 발열증상이 있거나 현장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바랍니다. (부산)

(6) 기타 경찰지원

가) 인도 교민 입국 지원('21.5.5.)

4월 24일 정부는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도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였으나, 현지 교민들의 반발로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4차례 특별항공편을 운항하여 교민 등 720명에 대한 입국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입국 교민들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은 임시생활시설 수송 버스에 교민들과 동승하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였다.

나) 강릉 외국인 집단감염 통역요원 지원('21.5.11.~17.)

5월 1일 강원도 강릉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강원도는 5월 6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전수검사 및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검사를 위한 통역요원 수요가 증가하였고, 강원도는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외국어 특채자 중 러시아어가 가능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1명을 선발하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강원도 강릉시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통역업무를 지원하였다.

다. 4차 유행 ('21.7.~10.)

2021년 7월 초,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7월 7일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으며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를 기록했는데 확진자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주로 20~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방학이나 휴가를 맞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 · 노래방 · 학교 · 학원 등의 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약 100개 팀의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점검하였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1차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중대한 책임이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향후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7월 9일 일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사흘째 서울에서만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새로 도입한 거리두기 4단계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하였다.

8월 13일 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더욱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확진비율이 13.6%까지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해졌다. 정부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하였다.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직접 안내와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고향 방문자제를 당부한 그간 두번의 명절과는 달리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백신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방역규제에 대한 그간의 국민 피로도와 70%에 이른 높은 예방접종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네 명을 포함해 최대 여덟 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추석명절 대이동의 여파로 연휴가 끝나자 확진자가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하루 확진 규모가 3천명을 돌파하였다. 정부는 10월부터 1 ·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백신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 60세 이상 고령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작하는 등 접종의 속도를 높였다.

(1)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경찰업무 조정

정부는 그간 강화된 방역여건과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제23차 생활방역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4단계 개편안에 맞춘 단계별 경찰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의 취지 및 경찰관 접종률 등을 감안하여 대민 접촉이 수반되는 경찰업무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경찰 내부 행정적 성격의 경찰업무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최대한 보장하는 등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였다.

특히 경찰관 2차 접종이 7월 중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찰업무 조정단계별 기준을 완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지역별로 상이한 행정명령 등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도권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증원

7월 첫째주 전국 주간 평균 환자 770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 발생 비중이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경찰과 군에 보건소 역학조사 행정업무 지원인력을 추가 요청하였다. 당시 경찰은 수도권 60개 보건소에 80명을 지원 중이었으며, 질병청의 요청에 따라 7월 9일부터 서울과 경기남 · 북부 소속의 현장실습 중인 제305기 신임경찰 교육생 120명을 추가 지원하였다.

지원 근무는 교육생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선발하였고, 경찰서별 실습생 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실습생 선발은 자제토록 하였다. 기준에 따라 선발된 인원이 교대 예정 인원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 시 · 도경찰청 교육계에서 시 · 군 · 구별 보건소 배치현황을 참고하여 자체 조정하도록 하였다.

추가 지원인력 120명은 질병관리청 주관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역학조사 지원 근무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근무 투입 전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경찰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1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제공을 시작으로, 그 해 9월부터 약 200여일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방역상황 안정화 및 경찰 대면교육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10일부터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다.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정된 교육과정은 사이버 ·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생활관 3~5동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수도권 경증환자 약 238명이 입소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입소자 격리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5명을 추가 지원하였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생활관 외의 강의동, 행정동 등 여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하였다. 1주 2회 이상 원내 소독을 실시하고, 생활관 주변 약 700m에 출입통제선 및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입소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중수본 주관의 지역주민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여론도 수렴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질서 유지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순찰을 배가하였다.

(4) 경찰청장 방역현장 점검

[그림 3-25] 경찰청장 홍대거리 방역현장 점검



7월, 국무총리는 전 부처 · 지방자치자단체 등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일환으로 각 부처 기관장의 방역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경찰청장은 7월 16일 야간 홍대거리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클럽 밀집지역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하였다. 노래방 · 음식점 등 업소 방문하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22시 영업제한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30대 행인을 대상으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임을 홍보하였다. 또한 여름철 휴양지를 맞아 방문객이 집중되는 대형해수욕장 2개소(대천 · 강릉)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 · 취식 금지 홍보 및 해수욕장 인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을 진행하였다.

(5)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 경비 강화

4차 유행의 가속화로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의 신규개소 및 재개소가 증가하면서 내부질서 유지와 이탈방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시설 입 · 퇴소가 빈번해지고 외국인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을 위한 경비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7월 18일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던 확진자 1명이 도주하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시설별 행정인력과 지원 경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시설입소자에 대한 식별을 위하여 근무자의 조끼(뱃지)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경찰은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 경비 강화 재강조 지시'를 통해 호텔형 · 연수원 등 시설특성에 따른 취약요소를 점검하여 CCTV · 문열림센서 등 보안시설을 보강하고 근무자의 위치를 시야 확보가 용이한 장소로 조정하였다.

(6) 의료인력 휴게공간을 위한 경찰버스 지원

[그림 3-26] 경찰 수소버스







7월, 수도권 발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 334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 ·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보건소 소속 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 의료인력에 대한 업무경감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경찰에는 의료인력의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휴게용 버스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선적으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중 휴게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안양시 선별검사소 2개소에 수소전기 경찰버스가 지원되었다. 냉방기 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일반 버스와는 달리 수소전기 버스는 무시동 냉방이 가능하여 매연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요청에 따라 서울시 소재 선별검사소 2개소(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관악구 낙성대 공원)에 수소전기버스 2대를 배치하였다.

[그림 3-27] 경찰 수소버스 배치장소



여의도 공원 낙성대 공원

(7) 추석연휴 경찰 특별방역대책 추진

중대본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고향 방문은 최소인원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추석 연휴의 이완된 분위기 속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동량 급증으로 추가 감염 확산을 촉발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부 거리두기 방침과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석연휴 경찰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연휴기간 중 역학조사, 유흥시설 방역점검, 방역적 교통관리 등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연휴기간 경찰관서 상황실 및 당직자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91건, 768명을 단속했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해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의 밀집도를 완화하였고 암행순찰차(67대) · 헬기(11대) · 드론(10대) 등을 활용한 입체적 교통관리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8) 홍대 지역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집중점검

9월에 들어 서울 홍익문화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외국인들의 집단 길거리 음주의 문제점이 잇따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9월 16일부터 한달 간 서울시 · 마포구청과 함께 홍대 일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다.

외국인 집결 예상시간 및 112신고가 폭주하는 21시부터 새벽 01시까지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하여 지자체의 방역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가용 형사인력과 관할 순찰차를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9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업하여 외국인 무질서 행위 계도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약 한달 간의 특별점검 이후, 10월 1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준법분위기 정착을 위해 홍대 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설정하여 3주간 집중점검을 이어갔다. 경찰과 마포구청, 자율방법대 · 상인현합회 · 서강대학교 등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홍대 일대 상상마당 등 상습위반구역 4개소를 집중점검 하였다.

[그림 3-28] 홍대 일대 특별방역 치안구역 지정





이러한 활동 이후, 주말 홍대 일대 운집 인원은 평균 3~4천명에서 500명대로 확연히 감소하였다.

(9) 핼러윈데이, 클럽 등 유흥시설 합동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축제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과 관계부처는 외국인과 젊은층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제적인 점검 · 단속을 추진하였다.

10월 29일부터 3일간 경찰관 3,71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58명이 투입되어 유흥시설 밀집지역 내 무허가 · 불법영업 및 집합금지 · 제한명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총 11,176개소를 점검하여 감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 등 105건, 1,305명을 단속하였다.

[표 3-9] 시 · 도경찰청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내용
서울	▶ 〈1단계〉 10.22.(금)~10.23.(토) / 경찰서는 클럽 형태 업소 합동 점검 · 단속, 廳 풍속수사팀은 무허가 클럽 등 단속활동 전개 ▶ 〈2단계〉 10.29.(금)~10.31.(일) / 가용경력 최대 동원, 클럽 밀집지역*(강남, 홍대, 이태원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 * 야간 시간대 기동대 배치, 가시적 예방순찰 실시
부산	▶ △클럽(감성주점 형태) 밀집한 서면 △젊은층 밀집지역(부산 · 동아 · 부경대) △관광 외국인 밀집지역(해운대, 광안리) 중심 합동 점검 · 단속 추진
인천	▶ 클럽 밀집지역(부평, 구월 등) 중심 합동 점검 · 단속
경기南	▶ 외국인 밀집지역(안산 다문화거리, 평택 미군기지 등)은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합동 점검 · 단속 및 가시적 위력순찰 ▶ 유흥시설 밀집지역(수원 인계, 안양역, 부천 상동 등) 합동 점검 · 단속
경기北	▶ 유흥시설 밀집지역 3개소(의정부, 일산동부, 구리) 등 합동점검 추진

[표 3-10] 주요 단속사례

구분	단속 내용
서울	▶ 〈무허가 클럽 · 집합금지 위반〉 10.30. 20:15경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 무대 등을 설치 후 무허가 클럽 영업한 업주, 손님 등 234명 단속
	▶ 〈무허가 유흥 · 집합금지 위반〉 10.30. 22:30경 송파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51명 단속

구분	단속 내용
부산	▶ 〈일제단속〉 10.29. 20:00~10.30.10:00경 경찰 375명, 지자체 25명 합동, 유흥시설 등 555개소 점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23건(195명)* 단속 * 집합제한 위반 18건(185명), 무허가 영업 3건(8명),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2건(2명)

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21.11.~12.)

일일 확진자 수는 1천 여명을 넘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치명률 · 중증화율 감소, 백신접종률 상승 등에 대한 자신감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정책의 일환으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즉,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백신접종 후 면역력 감소시기가 도래한 고령층과 아직 백신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의 회복을 위해 재택치료제의 도입을 서둘렀다. 또한 추가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서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며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4주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말을 맞아 늘어날 모임과 접촉 · 이동을 우려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7인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였다. 또한 12월 3일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처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 일일 신규확진자 7천명을 돌파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 추가 확보를 목표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나,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고치를 넘나들면서 의료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2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45일만에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 카페는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 배달만 허용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여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과 식당 · 카페 등 일부 시설은 21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대규모 ·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였다.

[표 3-11]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포함)
- ▶ **(2그룹)**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3그룹)** 학원,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유원시설,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
- ▶ **(기타)** 경륜 · 경정 ·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도서관, 마시지 · 안마소,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정부의 특단의 대책으로 연말임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가면서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방역상황이 호전되는 추세 속에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였다.

(1) 단계적 경찰업무 일상회복 방안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정부는 11월1일부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규제를 완화하는 1차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제24차 생활방역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관 및 경찰관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일상회복을 지원하는「경찰업무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였다.

우선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 중인 비상근무를 일괄 해제하고,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그간 중단된 경찰업무를 재개하였다. 회의 · 행사, 교육 · 훈련 등 일상업무는 방역수칙 허용범위 내에서 재개하고,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기능별 점검 · 캠페인 등 대민접촉 업무는 정상적으로 재개하되, 일부는 운영시간 · 사용인원을 제한을 두었다. 그 외 경찰관서 내 헬스장 ·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접종증명제를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하여 방역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경찰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2) '소관시설 책임점검제' 실시에 따른 경찰관서장 방역점검

12월에 들어서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병상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전파력이 기존 델타 바이러스 대비 3~4배 높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정부는 후 4주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12월 3일부터 4주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 기관장이 방역책임관으로 현장에 진출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부처별 소관시설 책임점검제가 시행되었다. 경찰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거나, 감염 위험이 큰 경찰관서 위주로 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 관서별 출입구, 민원실 등 대민접촉부서, 식당 · 회의실, 3밀 환경 사무실 등 고위험 환경의 방역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경찰청장은 방역관리 우수관서인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시 신중동역 유흥가를 방문하여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각 시도경찰청 및 국 · 관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소관시설이나 부서 위주로 점검하며 방역관리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이 기간 중 경찰 지휘부에 의한 현장점검은 총 175회 이루어졌으며, 경찰관서를 비롯하여 경찰 방역지원 현장, 유흥시설 밀집지역 등을 점검하며 흡연실, 지하 식당 등 방역 취약개소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

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1. 안보수사국 신설

가. 추진 배경

2020년 12월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 수사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면서 안보수사의 완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고, 경찰청은 국내 책임안보 수사기관으로서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주요 내용

경찰청은 기존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으로 편제하고 안보수사 단계(첩보수집–분석–수사지휘–수사)별로 과단위 기구를 구성하였다. 또한, 테러 · 방첩 및 산업기술유출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시도경찰청은 안보수사국 편제에 맞춰 과 · 계 명칭 및 일부사무를 변경하고, 조직 내 테러 · 산업기술유출 수사 인력 등을 재배치하였다. 또한, 경찰서 성과지표에 '안보위해사범 검거 성과'를 반영하는 등 탈북민 보호와 더불어 안보수사 및 첩보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29] 안보수사국 개편 후 조직도



※△1국 4과 11계(대)로 구성, △첩보분석 부서를 계→과 단위로 확대 △개정 국정원법 후속조치 전담부서 신설

2. 안보수사 역량 제고

가. 전문인력 경력 채용

기존 대공수사에 한정된 안보수사의 영역이 테러 · 산업기술유출 등 국익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역량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안보수사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국제안보 △방첩 · 대테러 △경제안보 △외국어 △첨단안보 등 분야의 전문요원 43명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117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 국정원법 개정 및 안보수사 영역 확대에 따라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문인력 채용 △교육제도 개선 등을 시행

[표 3-11] 분야별 세부내용

채용 분야	세부내용
국제안보	국제법, 국제정치, 안보, 국제학, 정치외교학
방첩 · 대테러	군사, 무기체계, 방위산업, 화생방, 사이버, 통신
경제안보침해	산업보안, 국제경제, 국제무역, 경제, 회계, 특허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첨단안보	디지털 포렌식, 악성코드, 가상통화, 블록체인

나. 안보수사 교육체계 고도화

안보수사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하여 국정원과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보경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1) 직무교육 개선

수사관별 역량에 따라 수사연수원 교육과정을 '신임(4주) → 심화(2주) → 전문(4주)'으로 체계화하고, 민간업체 위탁교육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 국정원 특별교육 등 신설

국정원의 수사 노하우 공유를 위해 기존 위탁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신설하여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 기술 탈취행위에 대응하여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3.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가. 안보수사활동

경찰은 202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명을 검거하는 등 국법질서 확립과 헌법가치 수호에 기여하였다.

특히, 북한 공작원과 접선 후 'OO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목적수행 간첩단을 검거 · 구속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과 공모하여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해킹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표 3-12] 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검거인원	45	15	12	13	27

앞으로도 경찰은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 국내 · 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확장

안보수사의 성패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에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안보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국정원과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사노하우 공유 △합동수사 전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초국가적 범죄양상을 띠는 안보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국 국무부 해외수사처(OCI),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을 비롯한 외국의 안보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경찰의 독자적인 해외 안보정보 교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OCI) 해외 도피 안보사범 추적 및 정보공유, (HSI) 테러 등 안보범죄 관련 공조

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

(1) 산업기술유출 사범 단속 활동

2021년 국가수사본부의 출범과 함께 기존 외사국에서 담당하던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되었다.

전통적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존 외사 기능에 편제되어 있던 17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안보수사국 산하 안보수사대 소속으로 재편하였으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였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특별단속'을 6개월 동안 실시하여 해외기술유출사범 28명을 검거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229명을 검거하였다.

[표 3-13] 해외 기술유출사범 주요 검거 사례

국가핵심기술인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 개발기술 자료를 중국 · 스웨덴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피해기업 팀장 검거 · 구속 송치(대구청)

(2) 기술유출 예방 · 홍보 활동

기존에 경기남부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오던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4개청(서울 · 인천 · 경남)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 내 민 · 관 · 학이 협업하여 기술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산업보안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였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 지원 방침에 맞추어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상생조정위원회에 경찰청 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였다.

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활동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사이버상 체제 선전 활동 등을 집중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사이트나 불법게시물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등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의한 해킹 · 악성코드 유포 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수한 증거물로부터 유의미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